



제269회 임시회
시정질문 · 답변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 경 자 의원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 소비자행정이 필요합니다.”

“열악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환경개선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일괄질문 · 일괄답변)입니다.



안 경 자 의 원

●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 대전시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그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시의 소비자 권익보호 행정정책 등 소비자행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소비자학계에서 볼 때 매우 뜻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6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소비자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였다는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대전에 뿌리를 둔 소비자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의 소비자행정은 전국 최초 소비자기본조례 제정이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빈약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대전시 소비자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본 후 그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의 표를 봐주시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소비자 상담건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대전시의 소비자 상담건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상담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수치는 1년 내내 특별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소비자 상담건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다른 시·도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소비자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소비자행정 담당 주무관은 1명뿐입니다.

이 1명의 주무관은 145만 대전시민이자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 외에 소비자 입장과 상반되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자행정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대전시의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무는 소비자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행정

중심이지만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산업진흥사무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조직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소비자행정을 전담하는 팀을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는 팀과 구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정이 잘 수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본질은 대전시가 소비자행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시·도와 비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다음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가 명칭은 다소 상이하지만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고 있고 대전시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간 차이점이라고 하면 대전과 광주를 제외하면 다른 시·도의 센터들에는 전임 임기제공무원을 1명 이상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소비자행정이라는 것이 시책 수립, 소비자 법령 관련 행정처분, 물가감시 기능과 같은 권력적 업무도 있지만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 정보 수집·제공, 시험·조사와 같은 비권력적 업무도 수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여 설치된 것이 소비생활센터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에는 소비생활센터 업무 중 소비자 상담 정도만 수행하는 파견직 직원 1명만 있는 실정이어서 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비자로서 대전시민의 권익보호 향상이라는 대의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길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만큼 소비자 보호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열악한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소비자단체라는 사명감만으로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예산이 없다면 없는 줄 알고 단체장과 소속원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18일 소비자단체장들을 모시고 소비자정책 관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의회에서의 정책간담회는 처음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만으로도 소비자단체가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가늠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시 소비자단체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 전화를 통한 소비자 상담입니다.

현재 4개의 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2대씩의 상담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시의 예산 지원은 각 단체별로 1,5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되는데 2대의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콜 건수에 따라 상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지원 상담비도 상담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콜 수 비례 지원을 받는 실정이다 보니 이를 다 합쳐도 2명의 상담원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체 자체적으로 어렵게 충당을 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계층별 소비자교육,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 개간 소식지 예산을 포함 8,500만 원 정도로 7개 단체가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45만 소비자 관련 예산으로 보기에는 민망할 따름입니다.

소비자 상담의 경우에는 국고지원 요청도 가능하지만 그 외의 소비자시책 관련사항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 대전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소비자 전담조직이 강화된다면 소비자시책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소비자단체에 사업 지원을 더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장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대전시민의 소비자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본 의원과 같은 마음으로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7개 소비자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께서는 소비자 보호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전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는 일이 많고 또한 대전시민을 위한 독자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많습니다.

예컨대 2018년에 대전시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전년 대비 70% 정도 증가했던 일이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체육시설업 관련 상담건수는 대전시 전체 상담건수 5위 안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업과 여행업에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역 차원의 대처는 전무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시 차원에서 사실조사, 법률검토 등을 진행하고 한국 소비자에게 피해구제를 직접 조정 신청하면 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법적 처리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돼 대전시민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전자상거래 등 소비패턴의 다변화로 소비자 피해패턴도 급변하는데 소비자 행정의 수준은 소비자기본조례가 제정되었던 26년 전의 소비자행정에 머무르고 있어 소비자행정의 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 정비 및 시설개선사업을 매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상권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이용으로 인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소비자의 전통시장 방문 및 소상공인 점포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소비자의 전통시장 이용 및 소상공인 점포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련된 소비자행태 실태조사조차도 실시한 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를 전환할 수 있을지 고민조차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정보제공, 교육 등 소비자 입장에서의 시책 추진이 수반되어야 전통시장 방문 및 소상공인 점포 활성화사업도 극대화할 수 있고 대전시민, 즉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 소비자 관련예산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전통시장 방문 및 소상공인점포 이용 촉진을 위해서라도 소비자 관련 시책 추진 예산의 확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소비자행정은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비자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을 팀 단위 이상의 조직으로 확대 구성하는 것과 소비생활센터에 소비자 분야 전문인력의 확충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향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활성화에 발맞춘 소비자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시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에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에 따르면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합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여성 5명 중 1명은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020년 기준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 중 절반가량만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묻는 응답에 가해자로부터의 보호, 접근금지가 70.5%를 차지했고, 심리·정서적 지원이 32.5%, 수사·법률지원이 1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으로 보이는 이곳은 대전시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인 1366대전센터입니다.

여기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으로 인해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시에는 피해자 지원시설,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1366대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피난처의 경우에는 위기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숙식 지원과 함께 상담치료 등이 필요한 피해자 또는 동반가족을 임시보호한 후에 상황에 따라 전문시설로 연계하는 등의 조치를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긴급피난시설은 야간, 심야 등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긴급보호하기 위하여 16.5㎡ 이상 규모의 긴급피난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1인 2평 이상의 필수면적 6.6㎡ 크기의 일조, 채광, 환기 등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보호를 받는 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대전센터도 여성가족부 규정에 맞추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상담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공간과 함께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용자들의 시대적인 욕구 변화가 큰 만큼, 그러나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설을 이용한 내담자들은 사무실과 함께 있어 조용히 쉴 수가 없다, 방이 좁아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다, 방과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 가려면 눈치도 보이고 불편하다, 방 이외에 휴게공간이 없어 보호보다 흡사 감금된 듯한 느낌이 든다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긴급피난처 입소자들은 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것이고 외부인의 시선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 자명한데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입소자들이 정신적으로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전이 되기 위하여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폭력유형, 다인가족, 유아, 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공간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담보호를 위한 공간과 공동생활을 어려워하는 피해자들에게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여 가족실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이용기간 중 최대한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고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절실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심각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를 5대 폭력으로 규정하였고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폭력유형에 맞춰 관련 범죄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들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전시민의 절반인 여성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폭력 피해여성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폭력 등의 여성범죄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이 시급해 보이는데 대전시에서는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전시가 되는 데 있어 그 초석을 마련하는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안경자 의원님께서서는 대전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비자 권익향상,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전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소비자행정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및 강화방안 필요성과 관련해서 소비자행정을 전담하는 신규조직 신설의 경우 우리 시 전체적인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피해상담, 구제 등의 행정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경제부서 팀 내 전담직원이 소비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17개 시·도 중에 6개 시·도만 실시하고 있는 전담팀 운영사례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우리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에 지금 상담원 1명이 있습니다.

시청 2층 민원실에 있는데 다른 시·도가 전문임기제 공무원 확충해서 하는 문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소비자 보호는 행정기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지만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왔고 또 안경자 의원님께서 의원님 되시기 전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셨던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깊은 지식과 어려움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는 조만간 논의를 해서 전문임기제 추가확보 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소비생활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 대전시 소비자단체 사업 지원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시 재정으로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본래 시민단체의 기본 규정을 하면 시민단체는 그 회원들 스스로 돈을 모아서 거기에 걸맞은 시민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받아서 운영할 경우에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소비자단체 전체에 대한 사업 지원은 아마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단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근무여건이나 급여를 시에서 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조금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전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한번 저희가 깊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일단 중앙정부든 지방정부의 재정을 시민단체들이 받아서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서의 고유한 기능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좀 전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소비생활센터를 보다 확대 개편하고 그 안에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본격적으로 시가 책임성 있게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더 진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께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민 피해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향후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방안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상당히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행정 시책을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늘려서라도, 또 공직자들이 전문가적인 여러 가지 입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소비자정책 전체를 가다듬고 강력하게 시행하고 또 소비자들 피해에 대해서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사실상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 소비생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속적인 상담원 교육훈련, 전문성 확보 이런 것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센터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 개선과 관련한 국비 지원 확대나 이런 것들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위탁했을 경우, 지금 저희가 대전시 소비자단체를 보면 7개 단체 정도가 대전소비자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하고 대전충남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 한국부인회 대전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지부, 이 7개 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현재 7개 단체가 12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은 7,550만 원 정도, 민간경상보조금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완전하게 단체가 모든 걸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풀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시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과연 민간경상 보조금을 확대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전체적인 소비자 보호를 통합해서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아예 위탁하지 않고 직접 실행하는 방법도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위탁이 나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는 기간까지 제대로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이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딸아이도 있고 집사람도 있습니다만 가정폭력이든 아동폭력이든 폭력,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근절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 더 이상 만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전체 사회가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성폭력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시설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여기에서 지금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인 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피난처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는 대전YWCA에서 200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 운영에 있어서는 긴급피난처에서 최대 7일까지 생활이 가능하고 또 1366센터에서 유형별 폭력피해 별도로 보호시설로 추가인제도 가능하고 저희가 유형별로 1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공간이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기준이 100㎡ 이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YWCA에서 하고 있는 대전센터는 126.5㎡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 기준은 충분히 충족했습니다만 아까 보신 것처럼 여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분이 임시거주하기에 상당히 불편해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침대나 공간에 있어서 독립적인 공간 구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함께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는 위탁해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탁할 때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1366센터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이 좀 더 여성폭력 피해자분들이 더 편안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건 필요해보입니다.

조간만 우리 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또 강조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실상 우리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유형별 방지대책과 예산을 한 52억 정도 지금 투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에는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해바라기센터에서 긴급상담 후에 유형별로 지원하는 이런 지원이 있는데 보다 면밀하게 여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 집행부에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 접근성 강화하고 피해예방을 위해서 캠페인하고 네트워크 강화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민관합동 캠페인을 연 4회 정도 하고 수시 10회 이상 안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인지·성평등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금 성평등 문제나 성추행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잠시 아차 하는 순간에 실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이에 대한 세밀한 교육들이 더 필요하고 우리 대전시도 사실 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기관을 떠나서, 특히 공직사회,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에서 남녀 간의 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은 더 세밀한 매뉴얼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가해해서 처벌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우선 대책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사회 전체 시스템을 고쳐나가고 예방교육도 하고 수시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래서 예방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 문제나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에 대한 정책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사랑과 고뇌를 저희 집행부도 깊이 받아들여서 좀 더 강화된 정책으로 시민들께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